

가상자산 트래블룰 제도에 관하여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이 시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트래블룰은 원래, 은행 간 자금이체 시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상을 기록해 두는 제도로서 수신인이 제재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금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합니다.

주된 목적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바꿔 말하면 자금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간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이 출현하기 전, 자금 이동은 대부분 은행 간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은행 간 트래블룰 제도는 나름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 출현한 이후에는 가상자산 이전 시 트래블룰 제도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i) 은행 계좌에는 매우 강한 금융실명제가 강제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는 부분적인 실명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 (ii) 일반 통화는 개인지갑 개념이 없지만, 가상자산은 개인지갑이 있다는 점, (iii) 일반 통화는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되어 국경을 넘기 어렵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한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좀 부연하고 비유하자면, 자금 이전의 입구에서는 은행 실명확인계좌 등을 통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자금 이전의 출구에서는 개인지갑의 존재 등으로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록 실명제는 아니지만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트래블룰 제도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특히, 트래블룰 제도를 강하게 시행하면 가상자산의 이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국제간 자금세탁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내의 경우 현재 두 개의 트래블룰 방식(코드 vs 람다)이 존재하는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입출입 경로 제한 및 개인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토콜의 일종이어서 복수의 방식이 존재해서는 안 되므로 이른 시일 안에 하나의 방식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업계에서 계속 논의 중).

상기한 대로 트래블룰 제도는 거래소 고객(은행 고객이기도 함)의 개인식별정보를 주고받는 제도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국제간 해킹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FATF도 크게 주목하는 부분이고 당행도 계속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